



NO.2021-14

2021.05.24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평가와 과제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chojg@kyungnam.ac.kr

이전 발행자료

- > [IFES BRIEF 2021-10]
북한의 군사행동 재개 평가와 전망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연 교수
- > [IFES BRIEF 2021-11]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 논의내용 평가와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 > [IFES BRIEF 2021-12]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계획과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최천운 교수
- > [IFES BRIEF 2021-13]
북한 핵 능력과 영변 핵 시설의 가치에 대한 소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03053)서울 종로구 북촌로 15길 2
TEL. (02)3700-0700
FAX. (02)3700-0707
http://ifes.kyungnam.ac.kr
E-Mail: ifes@kyungnam.ac.kr

1. 한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 개요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외국 방문이자 취임 후 열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5월 21일 워싱턴에서 개최됨.
 - 5월 20일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로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5월 21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에 대한 명예 훈장 수여식 참여, 한국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건립된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여 등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 파트너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해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은 단독,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뤄져 내외에 깊은 인상을 심어줌.
 -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비확산과 원자력, 미얀마, 기후변화, 코로나19와 글로벌 보건과제, 5G와 6G 기술과 AI를 포함한 신기술, 공급망, 이주 및 개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되고 합의함.

-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의 발전에 대한 양국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민주적 규범과 인권 및 법치 등의 비전을 공유하는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양국관계를 활성화 시키는 데 합의함.
- 양 정상은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봄.
- 경제안보를 통해 미국 중산층의 재건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국내 투자계획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으며, 기술혁신, 코로나19와 글로벌 보건 안보,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을 담은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Factsheet: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Partnership)’가 공동성명과 함께 발표됨.
-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등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의 존중과 더불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매우 이례적임.

2.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과 의미

○ 대북정책 공조와 한미동맹 발전 방향의 재확인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에 공감대가 형성됨.
- 구체적으로 한국 측의 입장을 미국 측이 수용하는 형태로 2018년의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 및 북미 간의 기존 합의에 입각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함.
-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양국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및 남북 이산가족 상봉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할 것에도 합의함.
-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정통한 성 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대행을 북한 담당 특사(U.S. Special Envoy for the DPRK)로 지명해 북한과의 외교협상에 임하게 할 방침임.
- 공동성명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침과 더불어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제한이 있었던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를 명기함으로써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군과 밀접하게 협력하는 55만 명의 한국 군에 백신 제공 의사도 밝힘.

○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다양한 한미 간 협력에 합의

-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확인함.
- 북한 문제를 포함해 공동 안보와 번영 수호, 공동의 가치 지지와 규범에 기반한 질서 강화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함.

-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공동성명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의 존중”을 강조함.
- * 3월 18일의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 공동성명에서는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침.
- 한국은 무역과 투자 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미·일·호·인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한 것은 처음임.
- 나아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함께 협력해가기로 했다고 밝힘.
- AI, 5G와 6G, 양자기술, 바이오 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과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의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협력,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확대를 포함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 공동의 안보와 번영 증진을 위한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천명함.

3. 평가와 향후 과제

- o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정상 차원에서 한미간의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확인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올렸지만, 이것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미 대화의 선순환을 가져올지는 불투명함.
 -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주 실용적이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유연한 방식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비핵화의 시간표에 대해 한미간에 인식이 차이가 없다고 말했지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북미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걸어온 북한(2020년 7월 10일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담화)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하기는 현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2021년 1월 열린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당시)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 여부에 달려 있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 따라 미국을 상대할 것임을 천명함.
 - 그렇지만, 북미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한미가 무엇을 북한에 제공할 것인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미국과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 클린턴 정권에서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로버트 아인혼은 북한이 핵물질의 제조 금지와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의 영구 중지, 이와 관련한 기술의 수출 금지 등을 지키는 조건부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 교섭,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 대북 인도적 지원, 일부 유엔안보리 결의의 일정 기간 중지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는데(朝日新聞, 2021.4.10. 및 5.2.),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단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됨.

-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가까운 장래, 즉 문재인 대통령 잔여 임기 중에 북미 정상회담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는 빠른 속도로 더욱 단호해지고 있는”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only competitor)*인 중국에 대항하려 하지만, 미국의 능력만으로는 중국 견제에 한계가 있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역할 분담을 확대해갈 것임.
 - * 「잠정적 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 3월 3일 백악관 발표,
- 한미동맹이 대북방위를 위한 한반도나 동북아시아라는 지역 범위를 초월한 글로벌한 전략동맹으로서 한미가 어떤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양국이 어떤 책임과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이며, 제한된 자원을 중국 견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 중인 해외 주둔 미군의 병력태세 재검토(Global Posture Review) 작업이 완료되면 주한 미군의 구조와 역할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전작권 전환과 연동하는 형태로 한미 연합방위체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미국과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에 해당하는 타이완 문제에 언급하고 경제와 기술면에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한국의 태도는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향후 중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한중관계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함.
- 공동성명에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명기되었지만,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기인한 역사문제가 무역과 안보문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일관계 개선 없이 한미일 3국의 실질적인 협력은 기대할 수 없음.
 - 특히, 일본이 한미가 사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와 모든 대량 파괴무기와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주장하는 것도 한일 간 협력의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이 기대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 *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스가 총리의 4월 16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온라인 강연 참조
 - 미국의 동맹전략이 악화한 한일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주최로 열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과 이와는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임.
 - 한일 간 현안의 민감성이나 해결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 없는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가 필수적이지만,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일본의 중의원(10월 20일 임기 만료) 선거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는 것은 일방적 양보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결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 변화가 보이면서 일본의 방위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4월 16일의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경제적 및 다른 형태의 강압(coercion) 행사를 포함해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와 합치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가 명기된 데 더해 일본 측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일본) 자신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는데, 이것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중국이 센카쿠열도나 타이완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본에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기시다 방위상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1% 미만으로 억제된 GDP 대비 방위비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종래와는 발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력을 강화”하며 일본이 공격을 받기 전에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힘(日本經濟新聞, 2021.5.20.).
 - 지난 3월의 2+2 합의에 따라 올해 다시 미일 2+2가 열리면 양국은 일본의 방위력이 중요한 대중국 억제력임을 확인하면서 센카쿠열도와 타이완 유사시를 상정해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소위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음.
 - 미일 및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나타난 안보상황에 관한 긴밀한 정책협의를 한일 간에 이뤄지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에 균열 초래 가능성 있음.

-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올림픽의 정치화는 한국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수 있음.
 - 4월 말 세 번째 긴급사태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꺾이지 않고 백신 접종율도 OECD 가맹 37국 가운데 최저수준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동원해 대규모 접종센터를 설치해 7월 말까지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의 희망대로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 5월 18일 현재 1회 이상 일본의 백신 접종 비율은 불과 3.9%에 그쳐 세계 평균 9.2%에도 미치지 못함.
 - 일본 국내에서 7월 23일 개막 예정의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나타날 수 있어 스가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것임.
 - * 5월 15일과 16일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올림픽의 ‘중지’를 40%가 ‘재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0대(51%)와 60대(54%) 등 고령층의 ‘중지’ 응답률이 높음(朝日新聞, 2021.5.17.)
 - 한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5월 18일 신장위구르에서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2022년 2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각국의 국가원수가 참가하지 않는 ‘외교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참가를 거부할 경우 한국도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음.

- 결론적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 발표된 공동성명은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미

국과의 동맹관계를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는 전기가 될 것임.

IFES 브리프 2021-14 2021년 5월 24일

발행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2 (03053)

전화: (02)3700-0700 팩스 | (02)3700-0707

홈페이지: <http://ifes.kyungnam.ac.kr>

-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IFES브리프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수시 발간하는 e-출판물입니다.